

## • CEO메세지 •

## 경영 투명성은 기본

강석인/한국신용정보 대표

투명한 기업경영의 대명사임을 자임하던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오히려 투명성 부족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신뢰의 상실이 초래한 미국 증시의 충격이 아니라 신뢰의 위기에 대한 시장의 경고에 따라 미국 정부가 신속히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CEO들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증작업을 순조롭게 마친 점이다. 투명성에 의한 신뢰가 미국 시장 시스템의 주춧돌임을 확인하는 순간 이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면에는 항상 경영 투명성 부족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단 값을 깎고 보는 것이다.

기업가치는 당연히 경영성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제시하여 제값을 받아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고,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는 회계제도와 관행이 정립되어 있으며, 시장에서 투자정보가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되기만 하면 시장은 투명해지고 투자자도 몰릴 것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담보가 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개별 기업의 윤리경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얼마 전에 각국 정부와 기업의 부패실태를 조사,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10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40위를 차지했는데 불행스럽게도 OECD 회원국 중에는 최하위권이다.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목소리가 높지만 기업의 관행과 의식, 그리고 제도가 공히 바람직하게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투명성과 윤리성이 뒷전으로 밀리던 시대는 지나갔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이 기본이라는 확고한 인식으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 • 주요뉴스 •

## 삼성研, “한국기업 윤리경영 미흡”

우리 기업들의 윤리경영시스템 도입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부금 제공 등 사회공헌활동은 자발적이기 보다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보고서에서 작년 기준으로 전체기업의 42%, 30대기업의 69%만이 기업윤리현장을 제정해 놓고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아무리 우수해도 윤리의식이 희박하면 시장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결국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또 90년대들어 국제기구들은 ‘윤리라운드’를 추진하고 있어 비윤리적 기업경영은 국제간 무역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경영성과의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의 과실을 어떻게 사회와 나누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 기업연구소 장려금 지급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가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 연구팀을 발굴·시상하는 등 기업 연구소 지원에 나선다.

신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업부설연구소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 1인당 연봉의 10% 이내에서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기별로 프로젝트 수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3개 연구팀을 발굴, 팀당 1000만원의 상금을 부여하는 ‘산업기술인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이와함께 ▲미래 유망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 협동연구팀을 구성해 팀당 2억원의 연구비 지원 ▲러시아·인도·중국 등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 지원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 잠재력을 갖춘 연구소를 선정해 제조기술연구센터 지정·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육성정책을 발표했다.